

‘철새업체 방지법’에 지역 건설사 숨통

철새업체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도내 건설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춘천에서 중소건설업체를 운영 중인 태모(55)씨는 “철새업체 난립으로 최근 2~3년 동안 수익이 미미해 가게를 닫을 지경”이라며 올 4월부터 폐업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도내 대규모 SOC사업의 대부분을 대형사가 수주했으며 소규모 토목공사 역시 철새업체에게 밀려 발주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건설업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발의
입찰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역 거주해야 참여자격 부여

타지역 업체 난입 물리적 차단
업계 “건전한 시장 조성 첫발”

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도내 건설공사액은 10조790억원으로 2014년 8조8,740억원, 2015년 9조6,790억원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림픽 관련 기반·시설 공사와 고속

도로, 철도공사 등이 추진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건설공사액의 규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도내 영세 건설업체들은 철새업체에 의해 일감을 뺏겨 과업 줄도산이 속출하고 있다.

향토업체의 보호방안 차원으로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지방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 제한 입찰 기준일을 당초 하루가 아닌 6개월로 대폭 늘린 것이 이번 지방개혁법의 취지다. 타 지역 업체들이 해당

지자체에서 발주되는 공사건의 입찰 참여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6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에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역공사 입찰 참여기준은 입찰공고 기준일로부터 단 하루 전날까지만 해당 지역에 머물러 있어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지방개혁법은 철새업체 전입을 막기 위한 물리적인 장치로 볼 수 있다”며 “건전한 건설시장이 조성되는 과정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규기자 koo@kwnews.co.kr